막대한 혈세 지원하고도…광주시, 버스회사 감독은 ‘뒷짐’

매년 2000억원 넘게 쏟아붓고 보험료 대부분도 광주시가 지급
민주노총 11년째 기사 자부담 철폐 요구에도 대책 마련 손 놓아
채용비리 사태 파악조차 안해…북구, 해당 회사 불법 정비 고발

광주시가 지난해만 20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도, 정작 업체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노동자들을 비롯, 노동계가 10년 넘도록 ‘사고처리비 자부담’ 관행에 대한 근절 대책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는데도 실태 파악은커녕,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채용 비리나 사고처리비 떠넘기기 등 회사의 ‘갑질’ 〈**광주일보 6월 23일 6면**〉에 버스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스기사들의 10년 외침, 못 들은 척 ‘귀막은’ 광주시=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떠넘기는 ‘보험료 자부담’ 관행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의 ‘단골 요구사항’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버스기사 사고처리비 자부담’ 관행 철폐를 요구해왔다. 광주시가 혈세를 투입,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또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 요구였다.

정성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원운수지회장은 “노동계는 11년 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바뀌는 건 전혀 없다”면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방치한 채 관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버스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준공영제 하에 대부분의 보험료를 광주시가 지급해주는데, 왜 버스기사들이 부담해야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노동계 요구에도, 실태 파악이나 근절 대책 마련과 같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노동계 불만이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하에 운영 중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다. 준공영제를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 경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스기사도 광주시민, ‘노사 문제’라며 발빼는 게 맞나”=광주시측은 “보험료 자부담 관행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회사와 버스기사, 노동자들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지원한 혈세만 2086억원으로 한 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인 버스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실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험료만 46억원에 달했다. ‘버스노동자도 광주시민인데, 광주시가 시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보고도 알아서 해’라는 식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도 비슷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광주시는 노사업무라는 이유로 사태 파악에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 소속 회사의 불법 정비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사 요구에 따라 해당 버스회사를 고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솔-다원이앤씨 이면계약 확인

경찰, ‘학동 참사’ 두 업체 관련성·불법행위 수사력 집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일반 건축물과 석면 철거 공사를 각각 맡았던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 등 2개 업체간 ‘이면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했다.

다원이앤씨측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면서 두 업체 간 관련성 및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면계약을 맺고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에 참여, 부실한 철거 공사를 방치하고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정식 계약에 따라 한솔에 넘겼지만 이후 한솔이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한솔이 다원이앤씨 외에도 백솔건설에게 일반건축물 철거를 재하도급한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한솔이 백솔과 다원이앤씨에 공사를 나눠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솔과 다원이앤씨는 7대 3으로 이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 다원이앤씨 관계자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다.

다원이앤씨 측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임의적으로 건물의 해체방식을 결정하는가 하면, 해체계획서와 다른 형태로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따라 한솔과 다원이앤씨 간 관련성에 주목하는 한편, 한솔의 공사 구역에 다원이앤씨를 포함시키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다원이앤씨 입건자가 1명 추가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20명으로 늘었고 이중 한솔·백솔 등 관계자와 감리자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2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과 북부소방서·경찰서가 합동으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청연메디컬그룹 대표이사 조건부 석방

청연메디컬그룹(청연한방병원 등) 대표이사가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대표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A씨의 석방을 허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지도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으로 제한했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소환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A 대표는 투자자 등 7명에게 170억원 이상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남서 5·18 행불자 추정 유골 2구 발굴

해남 우슬재에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다.

2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주변 봉분에 대한 발굴작업을 실시해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2구의 유골이 나왔다.

조사위는 31사단 해남대대에서 상등리와 우슬재 및 군부대 앞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가 무차별 사격으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해남대대가 사망자 시신을 보관하다가 4구를 광주로 후송하고 3구를 부대 인근에 암매장 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해남 우슬재 민간인 학살에 관련 조사과정에서 당시부대 인근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풀숲에 가려진 비정상적인 무연고 봉분 2기를 확인하고 이를 발굴했다.

1980년 5월 23일 해남에서는 31사단 93연대 2대대 소속 방위병 중심의 무장 병력이 매복해 있다가 새벽 5시께와 오전 10시~11시 사이 해남읍 우슬재와 복평리에서 지프차·트럭·버스에 사격을 가했다. 군 차단 지역을 접근하는 차량이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발포가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 중 1구는 기존 증언과 당시 사망자 나이대 등을 바탕으로 5·18 당시 사망자 명단에는 들어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A씨로 추정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행불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비교해 두 유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무소 직원 성범죄 피해 관련
양향자 의원, 경찰에 수사 의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여직원 성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의뢰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 의원 명의로 피해 여성이 호소한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가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